

盧대통령-與지도부 청와대 오찬

당·청관계 어떻게 되나

인사권 對 민심론... 확산만 막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오찬 회동으로 당청 갈등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청와대는 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로 하는 등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선에서 일정한 타협점을 도출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와 달리 이번 회동은 잠시 상처를 가리는 '어정정한 봉합'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 이상의 확산은 자칫 여론 전체를 공멸의 위기로 빠뜨릴 것이라 공감대 속에서 황급히 원칙론적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문제인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가장 큰 불씨는 아직도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인사권 갈등 봉합 = 이날 당청간 회동 결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대통령은 당의 조언과 건의를 경청하되 당은 조언과 건의를 합당한 방식으로 한다 ▲총리를 포함한 당정청간 고위 모임을 마련한다는 등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 대통령이 "인사권 문제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다. 청와대는 비선정치를 한 적도 없고, 특정 측근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위임한 적도 없었다"며 "인사권 존중"을 요구하자 참석한 대부분의 여당 인사가 존중의 뜻을 확인해 줬다. 특히 김 의장은 문 전 수석 '불가본' 발언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공개된 것은 실수가 있었다"며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의사소통의 방법을 제시하는 명분을 제시하며 당의 반발을 무마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계 개편 = 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당이 너무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당은 큰 배다. 선장이 눈에 잘 안 된다고 해서 하선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바깥에서 선장이 될 수 있으며 내부에도 좋은 사람이 많다"며 "내부의 사람과 외부의 사람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선도 하고 선장을 정하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이 향후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서 서서 정권재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원을 강조하면서 차기 대권주자의 외부 영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배를 갈아타면 배가 갖고 있는 좋은 정책과 노선도 수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해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김근태 당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인 불씨...갈등해소 아닌 '미완의 봉합' 노, 차기 대권주자 외부 영입 가능성 시사

만든 열린우리당에 대한 예정을 확실히 보여줬다.

◇재발 내재된 봉합 =이번 회동은 표면적 갈등 봉합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른 시각'을 뚜렷이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회동이 격의없는 난상 토론으로 진행되지 않고 정해진 결론의 범위 내에서 한정된 발언이 오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간 입장차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당의 이의제기를 '권력투쟁 상황'으로까지 비유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직접적인 반박의 모양새는 피하면서도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며 고개를 숙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노 대통령은 김병준 부총리 사태와 관련해 "당이 반대한 상황에서 임명했다니 문제가 터지고, 그러자 당이 고소하라는 식으로 더 혼든 것 아니냐"고 섬뜩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또 문제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정권'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가운데 "코드인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솔직한 사람은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일 언론 등을 통해 "지금은 권력투쟁 상황이다. 대통령을 때려서 잘된 사람을 못 봤다. 당을 나갈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가면 된다. 싫으면 자기들이 나가면 된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주요 인사에 대해 당은 의견을 전달하고 대통령은 조언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이석현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면 당 지도부가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관심 갖고 당이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제인범무 유효?

노대통령 "쓸만한 사람 써야 하는데..." 고심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인(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당청 회동으로 표면적 갈등은 우선 봉합했지만 '문제인 카드'가 재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측근들조차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며 설부분 예측을 경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

다. 다만 노 대통령은 문 전 수석의 비토 이유로 들어지는 '부산정권' 발언에 대해 해명 해주면서 "자꾸 '코드인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솔직한 사람은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는 "대통령은 문 전 수석을 두둔하면서 (장관으로) 관할하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시킬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이

라며 "생각이 같고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문제인 카드'를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오버한 것"이라는 게 참모들의 판단이다. 이날 회동에서 문 전 수석 문제를 거론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당이 간섭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를 단순히 "시킨다 안 시킨다"는 차원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호남·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세가 형성되는 등 현 여당 내의 기류로 볼 때 노 대통령이 문 전 수석 카드를 강행할 경우 당·청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과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법무장과 인사는 아직도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신나간 광주시

개통 6년된 제2순환도... 자동차 전용도로 뒤늦게 지정 물의

광주시민들이 지난 6년 동안 자동차 전용도로로 알고 이용해왔던 제2순환도로는 개통 당시 광주시가 자동차 전용도로(도시 고속도로) 지정 공고를 내지 않은 바람에 최근까지 일반도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 1월 개통 이후 6년 동안 사실상 자동차 전용도로로 활용돼 온 제2순환도로 전 구간에 대해 최근 6년이 지난 뒤에서야 자동차 전용도로(도시 고속도로) 지정공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시 통행 대상에 따라 법적 책임소재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제2순환도로 전 구간(문흥 교차점~각화·두암·학운·지원·용산·효덕·풍암·서광주역·서창·유덕·신가·신창 나들목~산월 교차점) 28.7km를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월 개통된 제2순환도로는 이미 설계속도 100km, 운용속도 90km의 고속도로인데다 통행제한 표지판도 곳곳에 설치돼 시민 모두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알고 활용해 왔다.

6년여 동안 오토바이나 자전거, 손수레,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식돼 왔지만 법적으로는 일반도로였던 셈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개통시점에 '해당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한다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법(제54조의 3 제4항)에 따른 별도 공고를 빠뜨린 실수를 범한 것이다.

광주시는 오토바이나 사람들이 제2순환도로에 자주 나타나며 따라 최근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뒤늦게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공고를 냈다. /채희종기자 chae@

배적대는 전남도

조직개편 지연사태... 후속인사 차질에 시·군 업무 파행

전남도 조직개편 지연사태로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 시·군에서 업무 차질을 빚는 등 연쇄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남도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빚어지고 있는 '파행'으로 도와 시·군 사이의 교류인사가 늦어지면서 민선 4기 출범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부단체장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는 등 후속인사가 늦어져 일선에서 업무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도 조직개편안 처리가 유보된 이후 도 분청 직제조정은 물론 후속 인사마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같은 실정때문에 통상적으로 도 분청 실국장급 인사와 함께 단행되는 시·군 부단체장(3,4급) 인사도 당초 일정을 넘겨 지난 7월 민선 4기 출범이후 부단체장을 포함한 새로운 진용을 짜고 의무적인 현안사업 추진을 구상했던 일선 시·군정이 첫 걸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지방선거 앙금으로 자

치단체장이 부단체장 교체에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전남도 인사가 늦어지면서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요 현안 결재과정에서 해당 부단체장이 배제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부단체장 근속 3년 제한이나 공로 연수 대기 등을 앞두고 있는 부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인사가 늦어져 어정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부 시·군은 전남도와의 인사교류 대상인 과장급(5급 사무관) 요원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인사 자체를 뒤로 미루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전남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지난 7월 전남도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경제과학환경국의 비대화, 정무부처사의 사무분장 포괄적 규정, 별정직 공무원 증원, 행복마을과의 사업취지와 기구개편 등 4가지 문제점 때문에 심의 유보됐다. 오는 8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제218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일부 손질한 수정동의안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

Advertisement for OPI Overseas Medical Specialist Research Institute, Honyang Branch. Features a large image of a doctor and patient,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62-223-3379, 062-223-3868, 010-8807-3863, www.opi.co.kr.